



차별에 대한 공동대응

유럽 및 한국의 관점



유럽연합 자금 지원



서문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1조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의견 또는 그 외 견해,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인권 보호 및 차별 철폐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성별, 성 소수자,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와 소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합니다.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차별 관련 이슈는 우려스러운 속도와 수준으로 부상/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에는 무차별 원칙과 연령,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은 위법이라는 점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도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한 차별금지정책, 규제 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차별에 대한 대응 및 해소, 양성평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LGBTI 평등, 그리고 사회적 회복력 향상에 있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및 상호교차성 관련 이슈의 근원 파악과 이주자, 성 소수자,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관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한유럽(EU)연합 대표부는 ‘차별금지’를 유럽연합 공공외교 프로젝트(EUPOP)의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몇 년간 인권이라는 포괄적 주제 하에 여러 차례 웨비나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책 및 국제 규제 체계, 그리고 차별에 적극 대항하는 다자적·국가적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존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공유는 유럽연합이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별 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유럽연합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과 같은 유사입장국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본 발행물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는 보다 평등하고 결속력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나날이 의기투합하여 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사의를 표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유럽연합 시민사회 네트워크(KEN)를 비롯한 유럽연합 공공외교 프로젝트(EUPOP ROK)에 참여하여 본 발행물의 발간에 기여한 유럽 및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하며, KEN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인권 보호 및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목차

서론	4
장애인 인권	9
성평등	17
성소수자 인권	27
이주민 및 난민 인권	33



서론

본 발행물은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유럽연합 공공외교 프로젝트(EUPOP ROK)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유럽연합 시민사회 네트워크(KEN)의 결과물입니다.

KEN은 인권과 차별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한국과 유럽 시민사회단체들이 소통 또는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장애인과 이주민 보호, 성평등을 주제로 몇 차례의 워크숍과 웨비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발행물은 활동가 통찰력의 핵심을 공유하고 현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유럽 시민사회단체 간 대화와 논의를 촉진하여 모두를 위한 살기 좋고 회복력 있는 사회 형성에 필요한 상호 이해와 학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와 시민 참여: 다양성. 포용성. 역량 강화. 주인의식.



로라 라상스

휴머니티 인 액션(HUMANITY IN ACTION) 네덜란드 사무소 대표

진정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받습니다. 이 명제는 자주 언급되지만 실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유, 인류애, 평등, 공정 등의 필수적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젊은 세대는 인권이라는 큰 틀 내에서 다른 가치와 신념을 인정하며 연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 자신감과 행동, 투표, 지지, 캠페인 활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법치주의에 근간한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젊은 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 및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이 자유롭게 타인의 생각과 타인을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차이를 수용하며, 생산적인 대화와 관계를 통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지식을 습득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 의사결정 과정은 전세계 젊은 세대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주요 결정권자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후 변화, 성·생식 건강과 권리, 평화와 안보 또는 교육 접근성 등 모든 이슈의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세대의 현실, 요구사항 및 맥락 등 구체적인 경험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인의 삶을 강타했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고, 특히 전세계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다양각색의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사회적 통합과 시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젊은 세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교차적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험, 어려움, 정체성, 기회는 각기 다릅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된 구조적 또는 기타 장애물 그리고/또는 차별을 유발하는 걸림돌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젊은 세대와 진정성 있고 유의미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 세대, 경계, 학문과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두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봉책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진실된 관계, 상호 신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주인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적이고 결단력 있게 현재의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뛰어나고, 용감하고, 창의적이고, 총명하고, 전략적인 젊은 옹호가와 활동가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휴머니티 인 액션(Humanity in Action)
네덜란드 사무소는 국제 비영리 교육 단체로,
젊은 세대의 인권, 민주주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 참여 및 행동 촉진을 위해 정보,
대화의 장, 영감을 제공합니다.

> www.humanityinaction.org

HUMANITY IN
ACTION

한국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변호사의 역할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한국의 시민단체는 1987년 민주화 항쟁 및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화 투쟁 중 발아된 시민적 주체가 형성된 데다가 교육수준이 높아진 도시 중산층이 주도하여 시민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확대시키고자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지원하는 여러 법도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슈에 대한 탈계급적인 '공익'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시민운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수자운동에서의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 담론이 확대되면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당사자 주도의 운동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발적인 시민행동의 동력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시위문화인 촛불집회에서부터 최근의 미투운동, 사이버 성폭력 철폐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참가자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활동가인 '인권변호사' 전통을 계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87년에 설립되었으며,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및 입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중반에는 전업 공익변호사라는 직업군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민주주의 및 사법 접근권 확대에 집중하면서 난민, 이주민, 장애인, 아동, 젠더, 해외기업 인권침해, 취약 노동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을 말한다면, 우선 시민운동이 정치권의 하위 파트너로서 복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전문성의 논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회비와 기여금에 의존하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구속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부족 및 지속가능한 상근 활동이 불가능해 대표와 젊은 활동가만 있는 '허리가 없는 시민단체' 등이 시민단체가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949년 12월 3일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UNHCR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 www.unhcr.or.kr



노인 차별과 코로나19: 인권에도 유효 기간이 있는가?



니나 게오르간치

에이지플랫폼유럽(AGE PLATFORM EUROPE) 인권&무차별 담당 간사

2020년 5월 1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노년층에 관한 정책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는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외에도 노년층의 빈곤, 차별, 소외 위험성을 증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46개 유엔 회원국이 지지한 해당 브리프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노년층의 권리가 1차 대유행 당시 우선시되지 않고 등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언론에는 전례 없을 만큼의 노인 차별적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뜻하는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는 신조어가 트위터에서 수천 번 사용됐습니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은 코로나19를 ‘노년층 도태’ 또는 병원의 ‘장기입원자’ 처리 수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년층은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중환자실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노년층은 동반이환으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 생존율이 저조할 수는 있지만, 나이 하나만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요양원은 전염의 ‘온상’이었지만 사태 초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요양원 ‘면회 금지 정책’을 시행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켰고, 결과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쇠약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생활연령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한 격리조치는 완화하면서도 노년층에게는 장기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다양한 역량과 니즈를 지닌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고, 노년층이 쇠약하며 부담스럽고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는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우리에게 노령화와 노년층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노년층은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며 코로나19 극복 방법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시행한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노년층에 대한 유럽 및 국제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코로나 시국 속에서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권고사항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노년 인권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엔의 새로운 협약은 나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인권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정책 수립의 도덕적·법적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지플랫폼유럽(AGE Platform Europe)은 50세 이상 장년층의, 장년층을 위한 유럽의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로, 장년층 이익을 도모하고 우려 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www.age-platform.eu

The background features a vibrant, abstract design of swirling smoke or liquid in shades of red, purple, blue, green, and yellow. Overlaid on this are two concentric circles: a larger, light teal one and a smaller, white one in the center. The text is positioned within the white circle.

장애인 인권

한국장애인인권 운동과 유엔 장애인인권리협약



장애인 인권

김미연

UN 장애인인권리위원회(CRPD) 위원(2020년 현재)

현재, 182 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유엔장애인인권리협약(CRPD)은 2000년도 멕시코 폭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여덟 차례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협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장애인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였습니다. 한국은 2008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저는 유엔장애인인권리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워킹 그룹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연대의 대표단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초안에는 여성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으며 여성주의적(gender)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전세계 장애여성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장애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였고 장애여성 단독조항(당시 15bis)을 작성하여 우리 정부로 하여금 제 3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제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장애여성은 장애인 사회에서도 복합적인 차별 대상이며 가장 소외된 계층임을 인지하고 한국 장애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15 bis 장애여성 조항 신설을 특별위원회에 제안하고 유엔 가입국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애 여성 조항이 들어간 상태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들은 가입 직후 2 년 이내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4 년마다 국가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장애인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당사국의 시민단체는 CRPD 국내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항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장애인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 이행을 통해 국내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바꿔갑니다. 이를 위해 유엔장애인인권리협약 교육을 통한 권리 이해, 협약 내용 전체적 이행 모니터링 활동, 한국 장애인 인권 현황과 연결된 협약 내용 중심 보고서 작성 및 장애인 권리옹호 법률가, 유엔인권정책센터 여성과 아동 영역 등 시민사회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견해’를 통해 이끌어낸 한국의 장애 인권 이슈는 인권에 기반한 장애 접근법,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인적 자원 확장, 장애인 정책과 입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부여 및 장애여성 성폭력 방지, 특화된 정책 개발 등입니다. 이는 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에서 인권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CRPD 의 이행 모니터링에서는 제 4조 3항과 제 33조 일반논평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 참여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의 중요성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협상, 개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협약의 협상과 초안 작성에 있어서 장애인의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와 관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줌-> 장애인을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게 합니다.

한국과 유럽의 시민사회 교류를 통해 CRPD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 중 시민사회가 어떻게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전략, 복합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 그리고 지적 정신장애인의 권리 등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전략 등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회원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단체입니다.

> www.ohchr.org/en/hrbodies/crpd/

지적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장애인 인권

헬렌 포탈

인클루전 유럽(INCLUSION EUROPE) 옹호 및 정책 본부장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에서는 장애인 인권 관련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유럽연합은 지역기구로서 최초로 해당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 무차별 원칙, 사회 정책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법적 능력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며 통제되는 삶을 살고, 간혹 폭력 및 학대의 대상이 되며, 차별을 겪고 특수 학교로 보내져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은 취업이 어려우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설에 감금되거나 치료 거부를 당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이 알려지며 앞서 언급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개선, 지적장애인의 권익 증진, 의사결정 과정 및 회복 방안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 참여에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현존하는 기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가독성이 높은 기사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클루전 유럽 회원들은 지적장애인에게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nclusion
europe

인클루전 유럽(Inclusion Europe)은 공인된 비영리 단체로, 지적장애인과 가족이 모든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 및 완전한 포용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www.inclusion-europe.eu



장애인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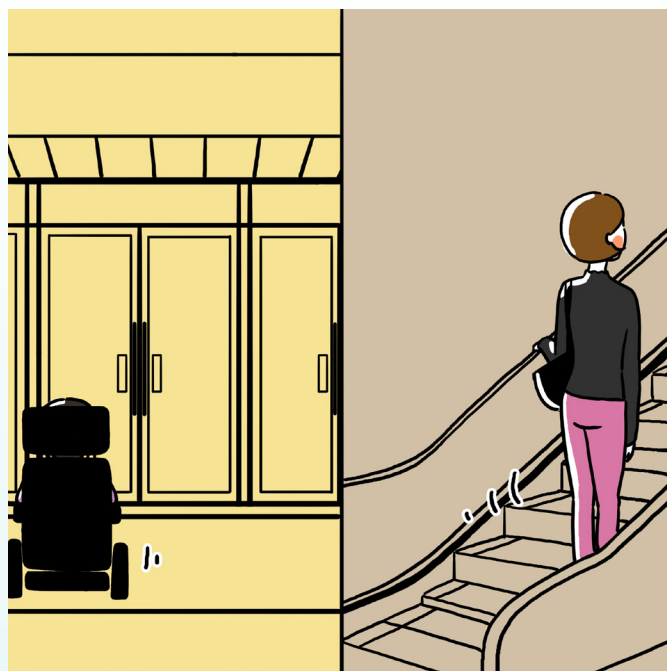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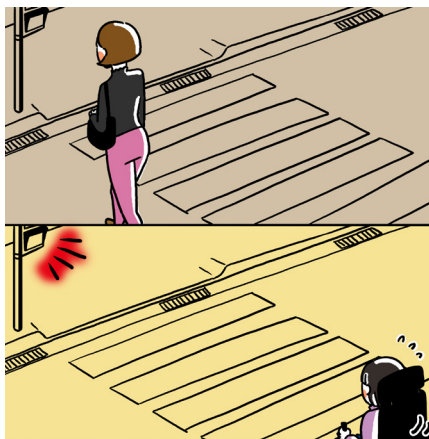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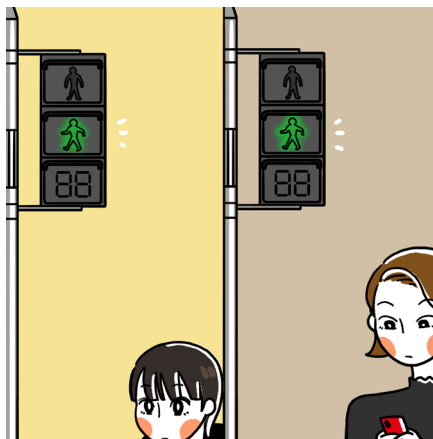
저자 : 안느 데렌





영화를 보러 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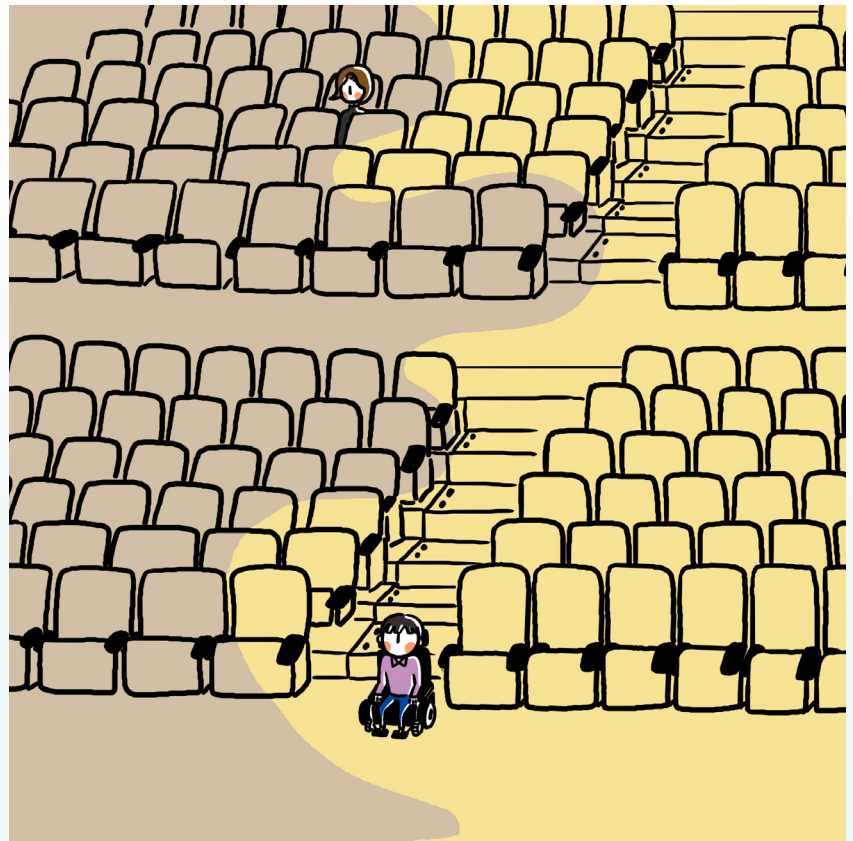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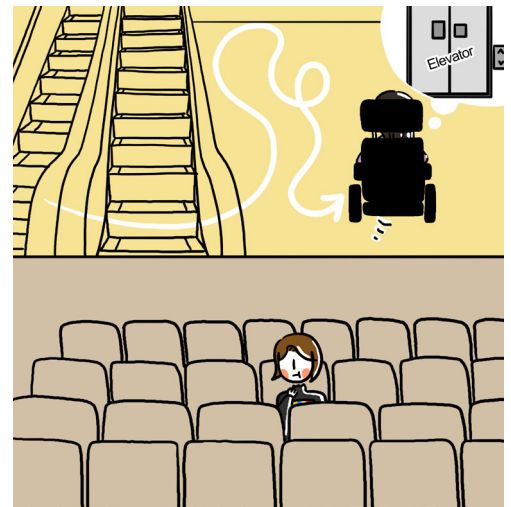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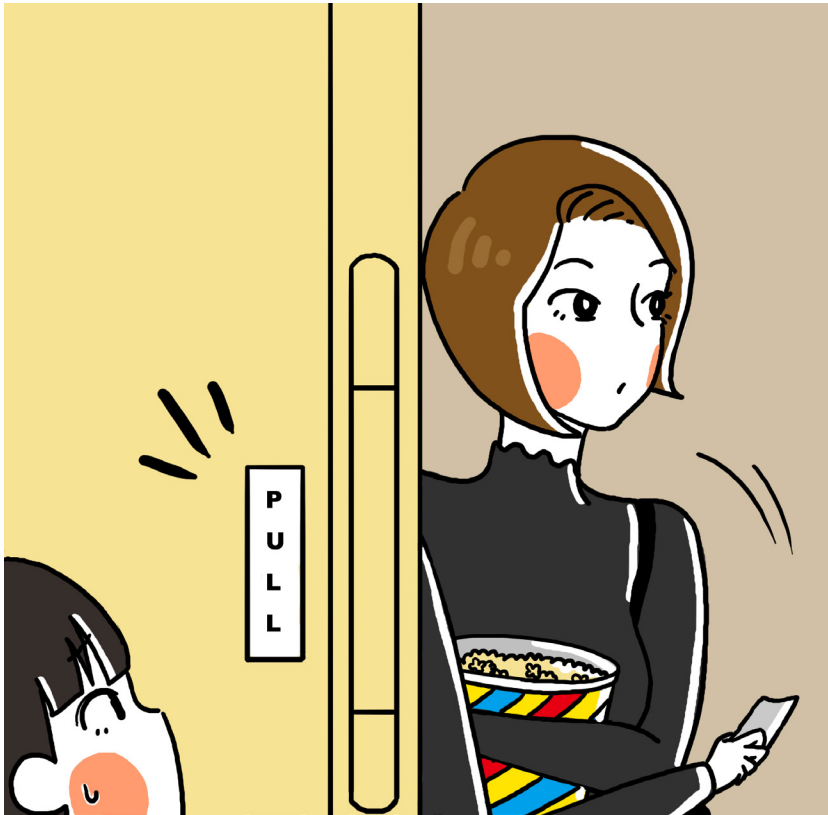
How to go to the movies



>>>

장애인 인권

저자 : 예령



The background features a vibrant, abstract design of swirling smoke or liquid in shades of red, purple, blue, green, and yellow. Overlaid on this are two concentric circles: a larger, light teal one and a smaller, darker teal one. The text '성평등' is centered within the smaller circle.

성평등

여성운동의 유산과 젊은 세대의 선택



성평등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배우자의 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여성 할레, 경시되는 무급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세계 페미니스트는 성평등 퇴행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성평등적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여성이 군사독재 타도, 남북통일, 노동자 및 농민 등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사회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198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여성은 가부장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군사독재 체제가 종식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여성, 환경, 평화, 복지, 반부패 등 새로운 사회 운동의 안건을 기존 민주화 아젠다를 넘은 새로운 시민 사회 아젠다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운동 전개 과정에서 여성단체는 적극적으로 최초의 여성 폭력 방지 및 법적·제도적 체계 개선을 위한 연대 캠페인을 열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1994년에는 성폭력 방지법이, 1997년에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2004년에는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부성 우선 원칙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 및 민주적 성장을 이루며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배제한 채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며 신빙성도 없습니다.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민주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전히 전세계 평균 24.5%에 한참 못 미치는 17% 미만입니다.

돌봄의 사회화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 돌봄과 임신 및 출산 관련 업무는 아직도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4.5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문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분노가 증폭되었지만 정부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위 세대에 대한 젊은 여성의 불신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와 젊은 페미니스트의 공조를 통해 이 모든 역사적 서사의 끝에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KWAU)은 산하단체들을 거느린 단체를 말합니다. 여성단체 간 결집 및 집단행동을 통해 양성평등,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http://women21.or.kr>

 KWAU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

상호교차적 관점의 페미니즘



성평등

히아 미어스

유럽여성개발원(WIDE+) 코디네이터

우리는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세계 성 격차 연례보고서 2020은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해 최소 한 세기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보고서가 코로나19와 여성 인권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인해 양성 평등 측면에서의 진전이 더디며, 심지어는 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양성 평등을 달성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유럽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거리 운동, 초국가적 연대, 온라인 캠페인 활동이 대폭 증가해 유럽 내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수의 운동은 가부장제뿐만 아니라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식민주의, 경제적 제국주의, 착취, 인종 차별, 성 차별을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호교차성 접근방법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상호 연결성을 통해 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단순히 계층, 인종, 성별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차별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요소가 사회를 나누기도 하고 결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아젠다는 지배적 경제·정치 체계를 보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최근 부각되는 또 다른 이슈는 디지털화입니다.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세상 밖에 존재하는 권력 비대칭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여성개발원은 디지털화의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 체계'에 참여하는

글로벌 워킹 그룹입니다. 유럽여성개발원은 유럽 의회에 사이버 폭력 방지 관련 권고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는 젠더 기반 사이버 폭력의 범위, 정도, 유형, 성별, 상호교차성을 고려한 법적 실용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향후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낙관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중의 사고방식이 자유 및 존엄성에 기반한 페미니즘 지향적 관점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유럽여성개발원(WIDE+)은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 지속가능한 생계, 인권 실현을 위해 여성 인권 증진에 집중하는 유럽의 협회 및 활동가 네트워크입니다.

> <https://wideplus.org>

한국여성인권의 성과와 과제



성평등

황금명륜

‘젠더교육플랫폼효재’ (GET-P) 원장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아주 빠른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은 여성인권 분야에서도 속도감 있는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필두로,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례법, 여성발전기본법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성매매처벌과 금지/보호에 관한 법, 가정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일일이 소개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난 30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성과 중 하나는 ‘호주제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아주 빠른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은 여성인권 분야에서도 속도감 있는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필두로,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례법, 여성발전기본법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만), 성매매처벌과 금지/보호에 관한 법, 가정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일일이 소개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난 30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성과 중 하나는 ‘호주제 폐지’입니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이 남성의 부인, 딸로서가 아닌 그녀 스스로 자신의 시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한국에서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영역 즉 의식과 관행이라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과 중 하나가 공적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국회 등 입법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6만8천여개의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젠더폭력 예방에 대해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한국은 법적 제도적인 의무교육을 통해 의식과 관행의 더딘 진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유럽 연사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이런 의무교육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성평등 교육으로의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나 도전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젠더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과 EU 간 연대활동의 가능성 모색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젠더교육플랫폼효재
Gender Equality Training Platform

젠더교육플랫폼 ‘효재’(GET-P)는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 www.getp.or.kr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항하며



성평등

니콜라스 스펫시디스

헤라클리온 여성연합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분명하고 확실한 인권침해 사례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됩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며, 폭력 신고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학대부터 사이버 폭력까지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방문해 성 고정관념, 건강한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폭력을 인지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 (리벤지 포르노), 동의 없는 사진 공유의 형태로 폭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즉각적 변화 보다는 학생들의 중장기적 사고방식 및 행동 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학생, 교사, 궁극적으로는 학부모로 구성된 학내 안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여 사이버 폭력에 공동 대응하고 폭력 사전 방지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지하며, 여성과 여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마땅히 우리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라클리온 여성연합회(UWAH)는
여성 및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에 대한 문화 개선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 <https://kakopoiisi.gr>



한국의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성평등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KCSVRC)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 물결 속에서 탄생한 여성인권 운동 단체입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대응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으며, 모든 활동가들은 2030 세대입니다. 여성혐오에 대항하여 독립 사이트 '메갈리아'가 열리는 등 한국에서는 2015년 이후 페미니스트 reboot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7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수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지원 등 영역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비로소 이 폭력을 인지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한사성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사례 접수, 누적되는 피해 사례 삭제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정부 차원의 대응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사성은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성착취 산업을 고발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2019년 정부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이 발표되었고, 웹하드에서 유통되던 피해촬영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일어난 가운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일반 시민 대상 캠페인과

교육 등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성 착취에 대한 대응을 해오면서 이 문제가 성(性)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폭력은 누군가에 대한 폭력 또는 착취이며, 인권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공간은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페미니즘 운동 최근 경향은 무엇인지, 또한 유럽에서는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KCSVRC)는 비영리 기구로,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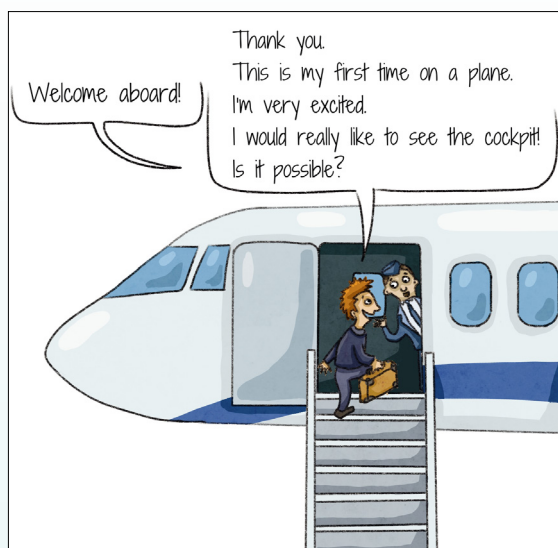
> <http://cyber-lion.com>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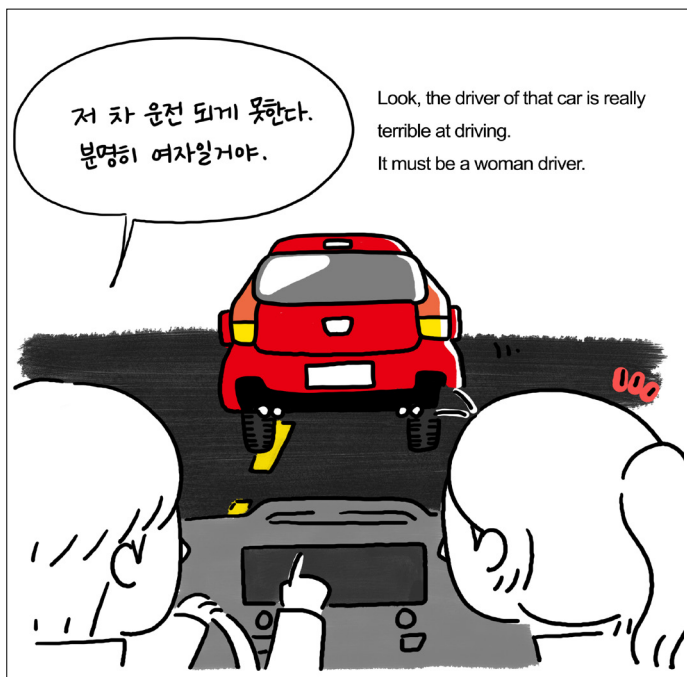
성평등

저자 : 안느 데렌



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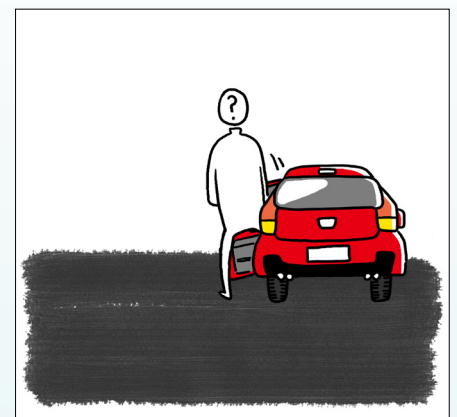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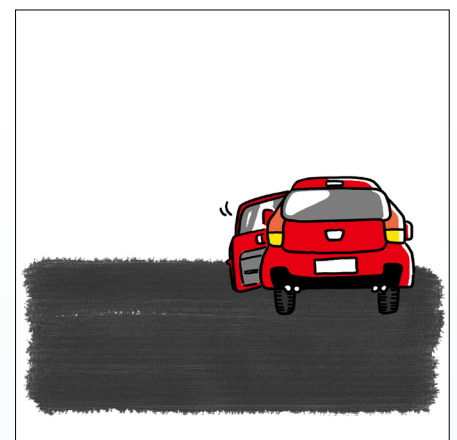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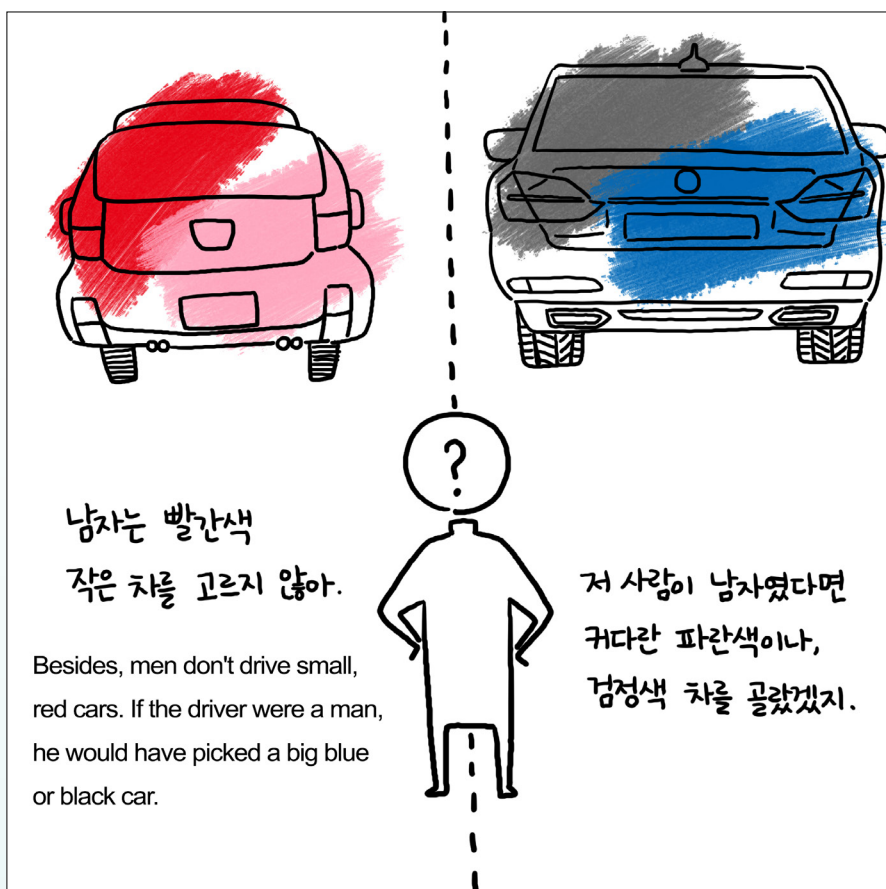
저자 : 예령



>>>



유럽연합 자금 지원



The background features a vibrant, abstract design. On the left side, there are wisps of smoke or mist in shades of red, orange, and purple. On the right side, there are similar wisps in shades of green and yellow. In the center, there are two concentric circles: a larger, light green one and a smaller, white one. The text is centered within the white circle.

성소수자 인권

코로나 19: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성소수자 인권

박한희

한국공익인권변호사모임(KLPH) 변호사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준비하던 2020년 5월 초 이태원지역 클럽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태원 지역 방문자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태원은 외국인과 성소수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도 성소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성소수자들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소수자의 명단 확보를 시도하려는 등 과도한 대응을 함으로써 인권보호보다 증오와 낙인을 부추겼고 지나친 동선 및 신상 공개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가 결성되어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HIV 감염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논의하기도 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지원 및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거나 방역당국과 직접 소통하고 언론 대응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결정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유엔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경계하는 메시지, 차별방지 정책 수립, 의료 인력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비롯하여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서 이분법 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시민단체에 대한 질문으로는 유럽에서는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없었는지와 인권과 방역정책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그리고 유럽의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공익인권변호사모임(KLPH)은 비정부 기구이자 비영리 단체로, 법에 기반하여 장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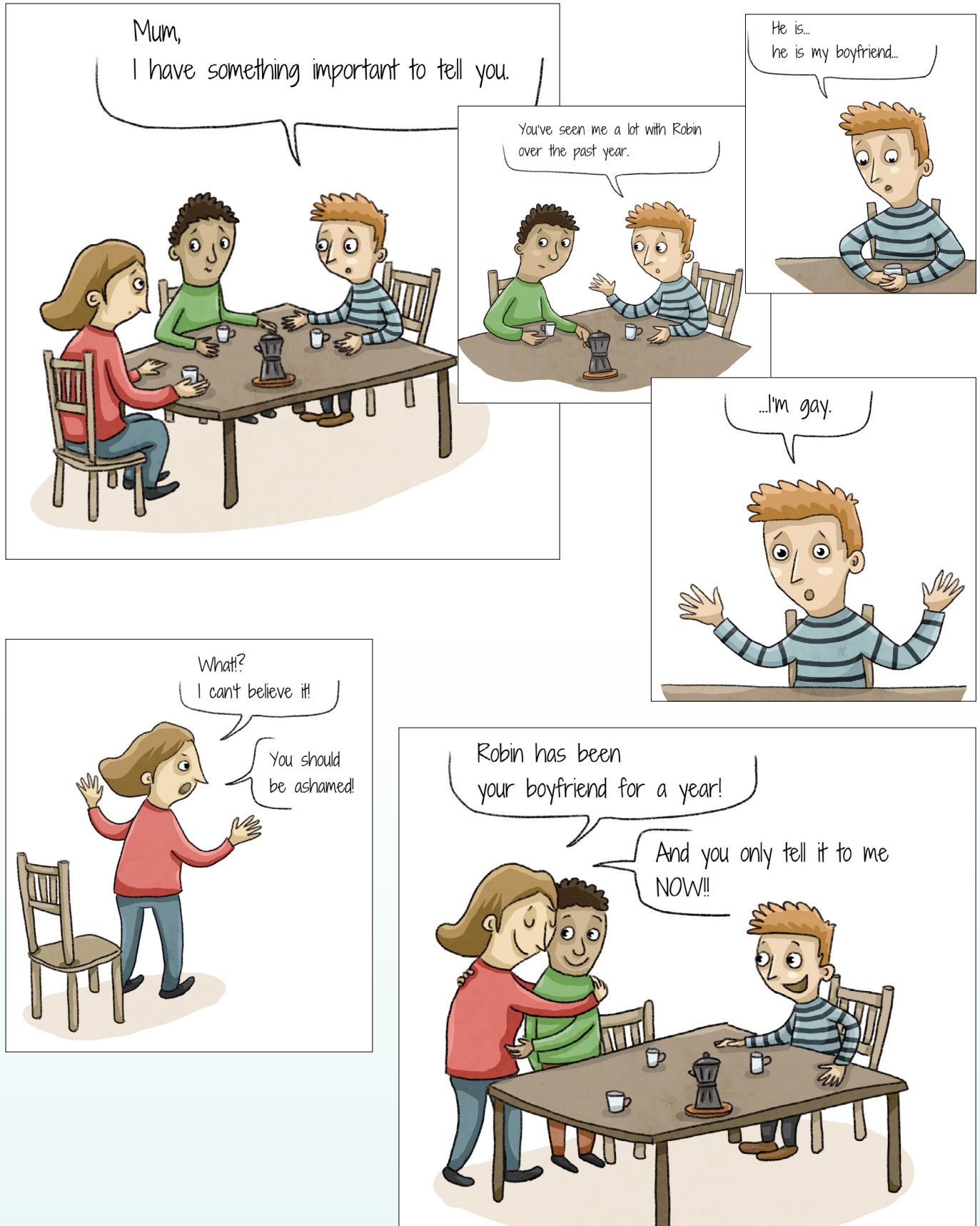
> www.hopeandlaw.org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

성소수자 인권

저자 : 안느 데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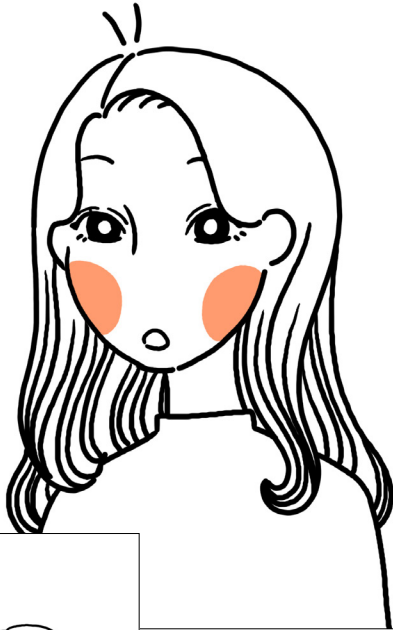
성소수자 인권

저자 : 예룡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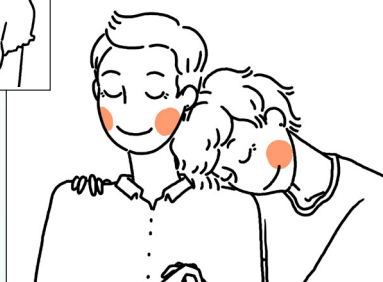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사랑이요.
Love.



사랑이요.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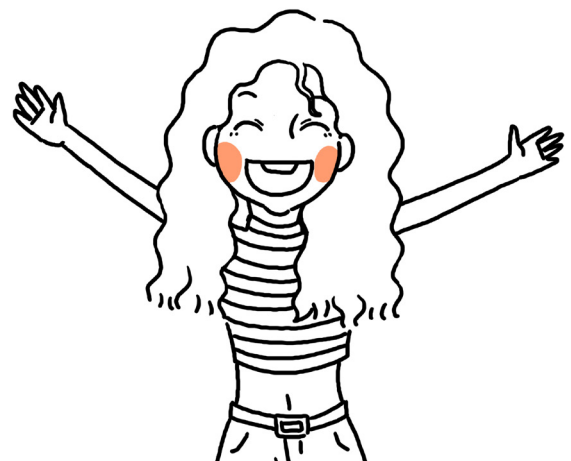
사랑이요.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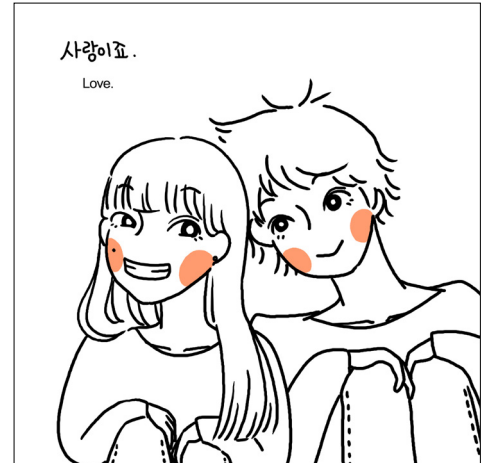
사랑이죠.
Love.



사랑이요!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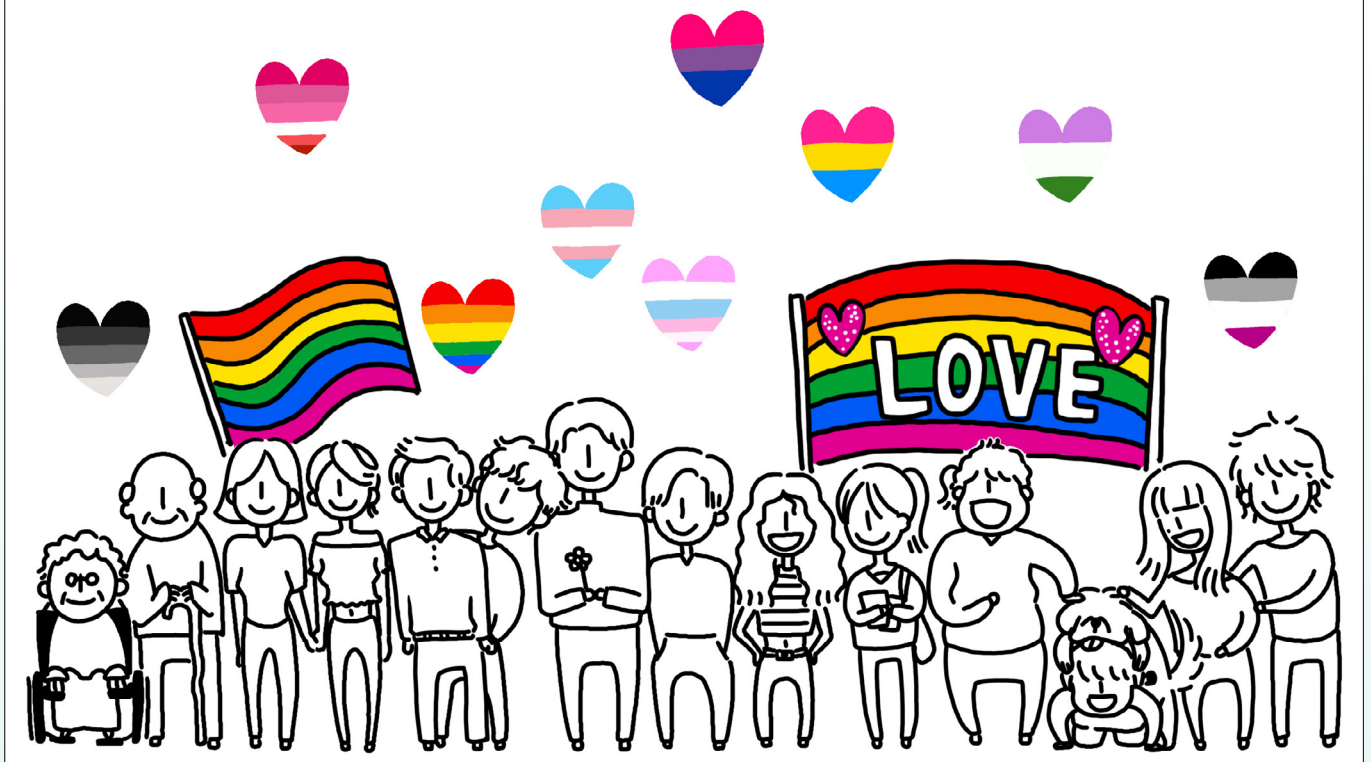


>>>



사랑은 혐오를 이겨낼 수 있어요.

Love can overcome hatred.





이주민 및 난민 인권

코로나 상황 속 이주민과 난민의 취약성

이주민 및
난민 인권



김영아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대표

코로나19 대유행 초반부터 한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마스크 배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생계 급여 관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주민과 난민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2020년 3월 기준 한국에 거주중인 약 220만 명의 외국인 중 126만 명이 장기 체류자였습니다. 이 중 28만 명은 미숙련 노동자, 약 3천 명은 난민 및 인도적체류자, 그리고 3만 명 이상은 망명신청자였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도 38만 명에 달합니다. 난민인정절차는 1994년 수립되었지만, 2019년 인정된 비율은 4%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다국어 상담, 이주 콜센터 운영 등 외국인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정책 수혜자는 소수입니다. 마스크 배부 과정과 경제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자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배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첫째, 정보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외국인 혐오와 차별에 대응했습니다. 둘째, 방역 및 지원 물품 수집 및 배부를 지원했습니다. 셋째, 이주민 및 난민을 배제한 지방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에 대응했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코로나 19 인종차별 반대'라는 슬로건 하에 다수의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고, 청와대와 지방 자치단체에 항의서한이 발송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권도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은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고,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취약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이주민, 난민과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공식적 소통 통로의 부재는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주민과 난민의 취약한 사회보장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는 비영리 기구로, 아시아 지역의 비자발적 이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모합니다.

> <http://mapcast.org>

MIGRATION
TO
ASIA PEACE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난민 및 이주민 사회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



레샤드 할리

유럽 난민 망명자 위원회 정책위원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와 사회의 보건 및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용소, 임시 거주지, 비좁은 시설에 거주하며 일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전세계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위생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은 난민 수용소에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은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망명 및 이주 관련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고,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발병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는 국제 보호 요청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등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며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망명절차의 일시 보류 조치를 발표했고, 2020년 재정착 절차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를 시행해 안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구금 조치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난민 또는 이주민 출신 의사, 간호사, 식당 점주, 배달원 등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기여와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난민 사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다국어 안내 데스크가 운영되었고, 봉쇄 조치의 취약 계층을 위한 클라우드편딩 전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줬다기 보다는 현 정책의 결함과 단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가들은 국내 난민 및 망명신청자 보호에 투자해야 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 및 위생용품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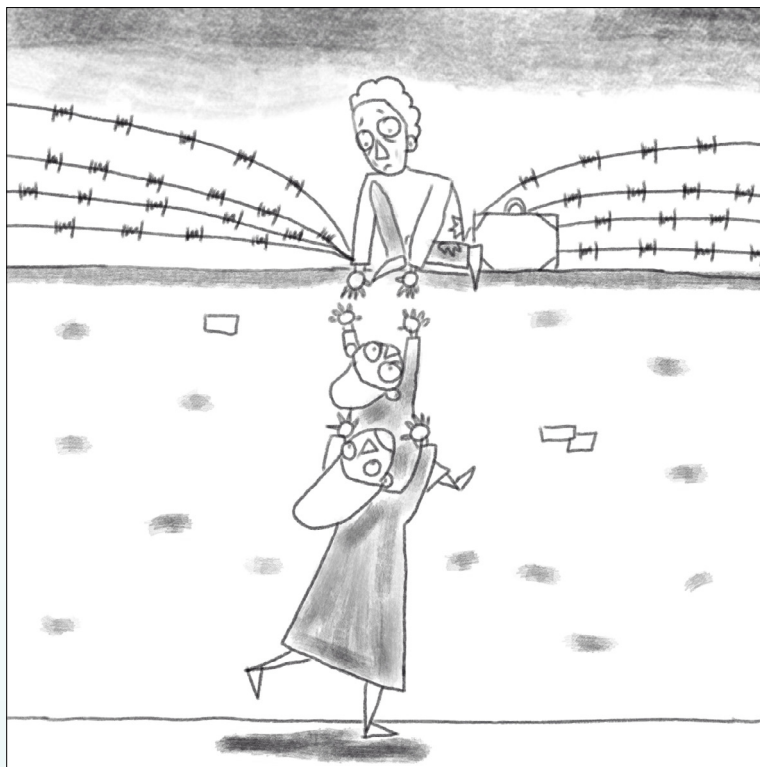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유럽위원회(ECRE)는
난민, 망명자 및 실향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비정부 기구 네트워크입니다.

> <https://ecre.org>



이주민 및 난민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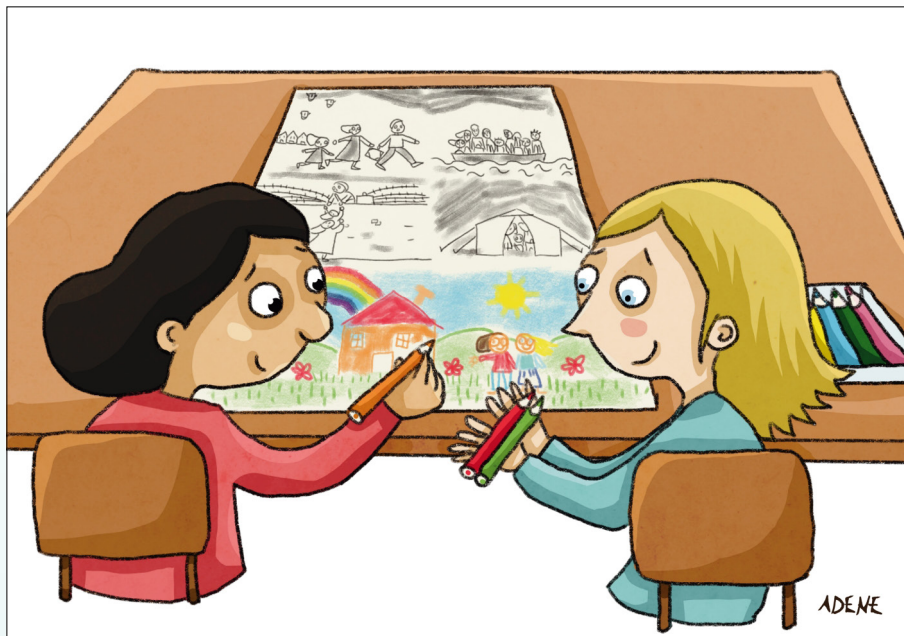
저자 : 안느 데렌



>>>



유럽연합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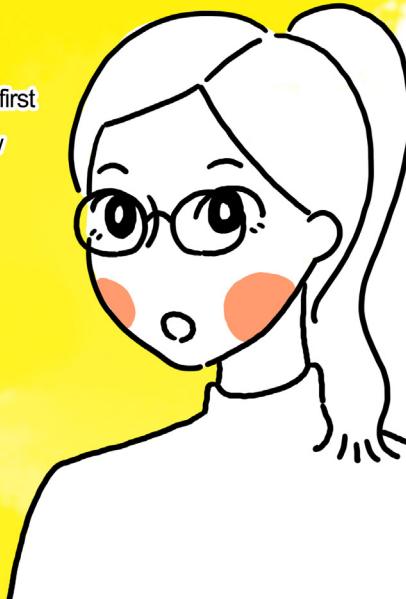
이주민 및 난민 인권

저자 : 예룡



대한민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는 것, 알고 계세요?

Did you know that South Korea was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establish a refugee law among the countries that signed the Refugee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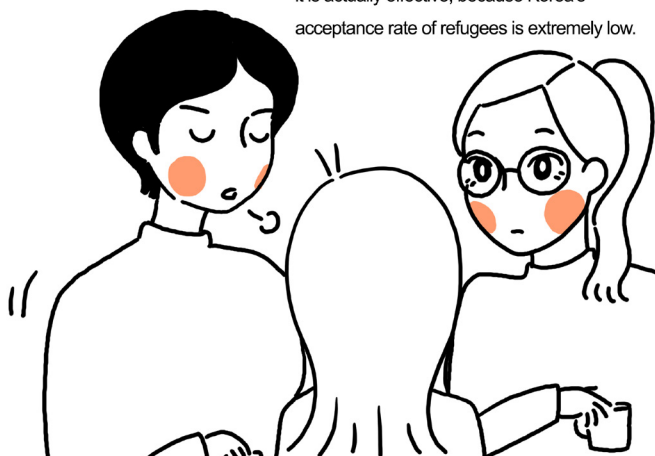
오, 정말요?
몰랐어요.

Oh, really? I did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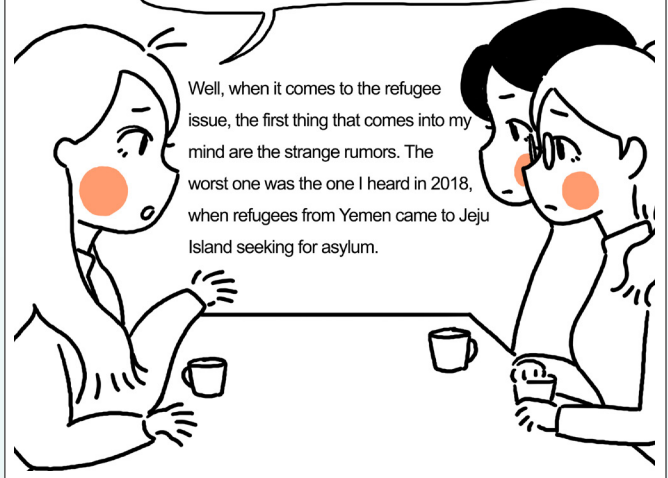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요...

But there are people who question whether it is actually effective, because Korea's acceptance rate of refugees is extremely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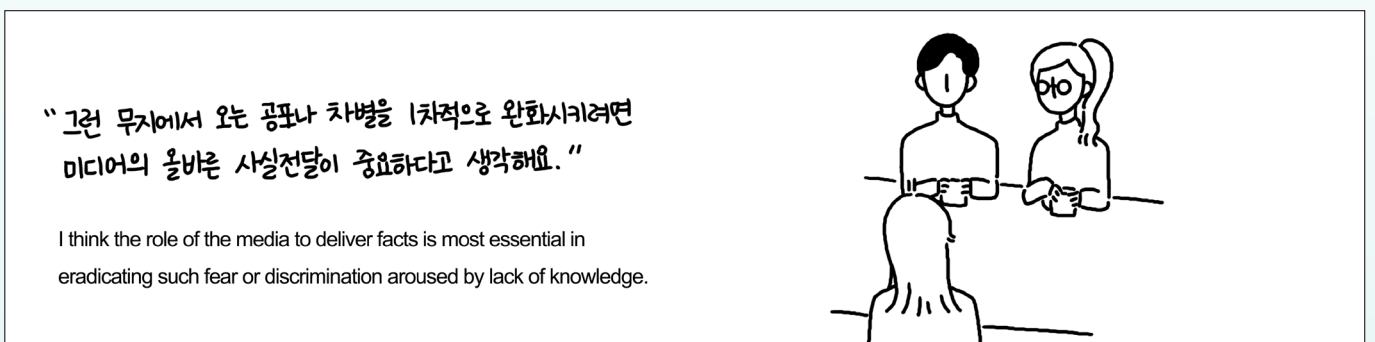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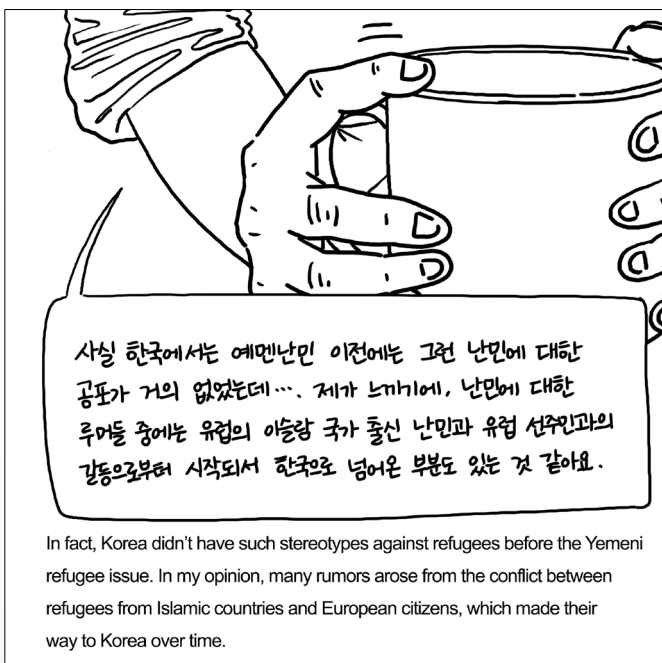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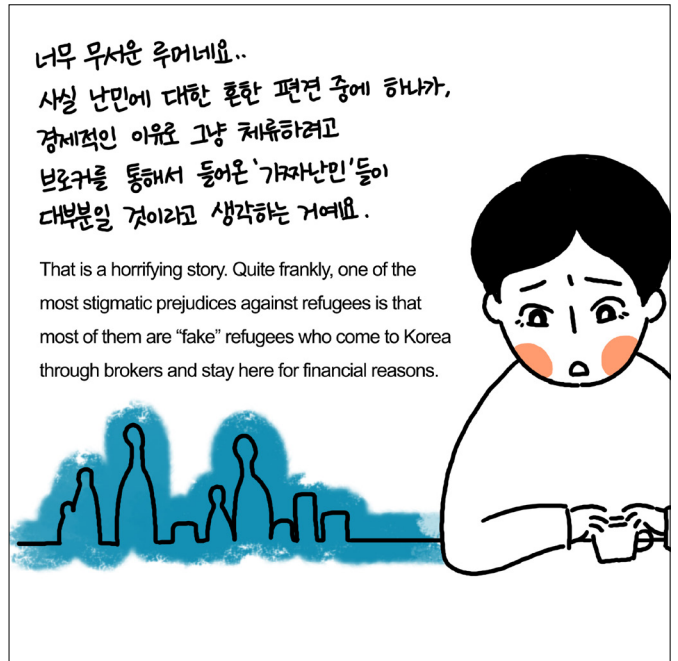


그렇구나.. 난민문제 하면, 저는 이상한 루머들이 먼저 떠올라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했을 때였는데,

Well, when it comes to the refugee issue, the first thing that comes into my mind are the strange rumors. The worst one was the one I heard in 2018, when refugees from Yemen came to Jeju Island seeking for asylum.



>>>





유럽연합 자금 지원

